

책을 열며 / "신부님 저도 평통사 회원이에요" / 문규현

제언 /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공동성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응방안 / 오혜란

제언 / 2006년 평택투쟁 현황과 과제 / 유영재

인물 / 비정규직 싸움의 현장 한복판에서 선 사람,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서훈배 위원장 / 오미정

돋보기 / 현실로 드러나는 용산기지 이전협정 및 LPP 개정협정의 문제점 / 이형수

현장 / 6차 SPI 대응 궤 현지투쟁_궤에 올려피진 팽파리소리 / 현지투쟁단(유홍, 박석분, 조광수)

기고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 경제적 한미동맹 강화 / 허영구

참가기 / 이길수 있다는 자신감이야말로 트랙터 평화순례의 성과 / 최성훈

표지사진 : 팽성읍 대추초등학교. 유리창에 그려진 대추리·도두리 주민들은 세계 최강대국에 맞서
530일째 촛불을 들고 있는 장본인들
사진 _ 오미정

| 여는 그림-窓 |

국민생명 팔아넘긴 5적!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서주석 대통령 안보수석비서관, 김숙 전 북미국장, 위성락 주미국대사관
정무공사, 이종석 통일부장관 등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평택 미군기지 확장 등 국민의 생명
과 재산, 평화와 안보가 걸린 국가중대사를 다루는 데 있어 국민을 속이고 국익을 팔아먹는 일에
앞장선 자들로, 사대매국, 허위 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의 죄를 범하였으므로 감옥에 갇혀 마땅
하다.

- 2. 14 77차 반미연대집회에서 -

글·사진 | 오미정

“신부님, 저도 평통사 회원이에요”

상임대표 문규현

푸근하고 다정한 논바닥을 일구고 있어야 할 트랙터들이 딱딱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올라섰습니다. 빠른 속도로 자기 시야만 바라보며 질주하는 차량들 사이로 느린 속도로 달리며 미군기지 확장 반대를, 자주국방을, 생존권을 외쳤습니다. 그들은 농사짓는 일을 백안시하는 시대풍조도 거스르며, 올 해도 농사짓고 내년에도 농사짓고 싶다고 눈물겨운 호소를 했습니다.

그 가슴 시린 처절한 풍경이 안고 있는 내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존중받고 존엄시 되어야 할 생명권과 생존권을 빼앗는 자들을 향해 자위권과 자주권을 선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시대 풍조를 뛰어넘는 전복적인 사고와 실천만이 그것들을 지켜줄 것임을 평택 대추리 도두리 농민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해도 농사짓고 내년에도 농사짓자. 얼마나 소박한 염원입니까. 내 손으로 가꾸고 살아온 곳에서 계속 살게 내버려두라. 이 얼마나 당연한 요구이고 정당한 권리입니까. 이 간절하고도 절박하기만 한 염원은 온 겨레의 운명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권과 패권논리에 의해 민족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지 않으며 일상적인 복지와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가 유린되고 있는 아픈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막아내는 싸움이 평택 농민들만의 것이 될 수 없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평택 농민들이 있는 곳마다 우리 평통사 회원들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 평통사의 존재 의미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결정적으로 달려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지금 이 순간과 앞으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평통사의 역할은 단순히 집회 참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미군기지 확장이전을 저지해야 하는가, 군축과 반전운동이 왜 중요한가를 끊임없이 이론적으로 전문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입증하는 몫을 그 어느 단체보다도 우리 평통사가 크게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모 출판사에 들렀습니다. 불 일을 마치고 나오려는 참인데 거기 북 카페 데스크에서 일하시던 한 젊은 여자 분이 인사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신부님, 저도 평통사 회원이에요.” 미안하게도 그 회원을 내가 먼저 알아보지는 못 했지만 얼마나 반갑고 기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평통사가, 우리 회원들이 이렇게 생활 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구나 싶어서입니다. 평통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폭이 그만큼 더 깊고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바로 자기 자신이 평통사이고, 평화이며 통일이라는 것을 늘 새기고 계셔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묵묵하게 자기 삶의 현장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 평화와 통일의 기운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우리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성과 대중성, 이 두 축의 기둥을 우리 평통사는 더 튼튼하게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올 해 끝 무렵, 평택 농민들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우리 스스로도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올 해도 평화를 짓고 내년에도 평화를 지읍시다.

올 해도 통일을 일구고 내년에는 더욱 성큼 그 앞에 다가 섭시다.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 제언 |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공동 성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응방안1)

평통사 미군문제팀, 인천 평통사 오혜란

1. 들어가며

노무현 정부는 지난 1월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고위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 허용하고, 한미동맹을 대북방어동맹에서 대중국봉쇄동맹으로, 지역동맹으로 재편하기로 미국과 합의하였다.

이는 지난 3년간의 한미동맹 재편에 관한 협상에서 한국의 참패와 미국의 군사전략적 목표의 관철, 곧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으로 동북아에서 진영간 대결구도의 강화와 대중국 포위전선의 구축을 노리는 미국의 입지가 한층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동북아 공존과 공영을 약속한 6자회담 공동성명은 빛이 바래고, 종속적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이 본격화되는 우려스런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정부당국자들은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이번 합의가 “(한반도를) 동북아 분쟁 발진기지로 사용하는 것을 배제”²⁾한 합의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이번 공동성명이 담고 있는 대북·대중국 적대적·공격적 성격과 동북아 전략구도에 미칠 영향을 애써 무시하고, 그 파장을 축소하는데 급급함으로써 이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장애로 되고 있다.

이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동맹 재편에 관한 한미양국의 논의 과정과 배경 및 공동성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사회진영의 올바른 대응방안을 찾아본다.

2.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 재편에 관한 역사적 논의 과정과 문제점

1)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동맹 재편의 의미와 배경

① 의미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작전범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로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말 그대로 주한미군이 한반도 불박이군에서 신속기동성을 갖춘 군대로의 변환을 통해 주한미군의 작전범위를 세계적 범위로까지 확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동맹 재편은 이러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작전범위의 확대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이 대응해야 할 위협의 종류를 대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재난구호, 평화유지 활동 등으로 넓히고(포괄동맹화), 한미동맹의 적용지역을 동북아 나아가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지역동맹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한미동맹이 대북방어동맹에서 대북 공격적 동맹으로, 대중국 봉쇄 동맹으로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뜻하며, 전 세계를 포괄하는 다양한 분쟁에 개입하는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를 말한다.

② 배경

미국은 냉전와해 이후 세계 패권을 계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 나토와 미일동맹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기동군을 창설하는 등 침략적 동맹으로 전환을 꾀해 왔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 재편도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미국은 미일동맹의 세계적 확대와 더불어 중국을 봉쇄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패권 장악을 노리고 있다.

2)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 재편을 둘러싼 논의 경과

한미양국은 1990년대 초 냉전 와해와 남북관계 발전으로 한미동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한미군의 지역역할 확대와 한미동맹의 포괄동맹화, 지역동맹화를 추구해왔다.

이에 대한 한미양국의 구상은 1994년 SCM에서 보고된 한국 국방연구원과 랜드 연구소의 '21세기를 지향한 새로운 한미동맹' 보고서에서 기초가 마련되고, 1995년~1996년의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미 국방부 국제안보차관실 아·태국장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안보대화'에서 밑그림이 그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양국은 1997년 SCM 공동 성명에서 "한반도 내 당면한 위협이 감소된 후에도 민주적 가치와 안보이익을 계속 공유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을 처음으로 민주적 가치의 공유에서 찾은 바 있다. 이어 1999년 공동성명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양국군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역지와 동북아 지역 안정에 크게 공헌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공헌할 것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힘으로써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도 동북아 지역으로 작전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은 한미동맹 재편에 관한 한미 군사당국자들 간의 공동인식은 2003년~2005년 SCM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2004년 SCM에서 전 세계적 테러리즘에 대한 한미양국간 협력 증진의 필요성과 그를 통한 한미동맹의 강화 공약으로 이어지는 한편, 1999년~2002년의 한미동맹 미래 공동협약, 2003년~2004년의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과 2005년의 한미안보정책구상(SPI)을 통해 그 모습을 구체화해 왔다.

이들 협상과 연구에서 한미군사당국은 615선언에 의거한 자주적 통일을 배제한 채 북한 붕괴와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전제로 미래 한미동맹의 역할을 다루고 있으며, "한미동맹이 대응해야 할 우려사항(위협 범위의 범위)"³⁾을 북한 핵, 미사일 위협, 테러, 마약, 위조지폐, 북한 체제 불안정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미동맹의 대북 공격적 성격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또한 북한 위협 소멸 후 한미동맹의 역할을 "아시아 역내 평화와 안정"으로 정하고, 한미동맹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임무를 "평화유지, 해양수송로 보호, 위기대응 및 재난 구호"로 합의했다는 것은⁴⁾ 한미동맹의 포괄동맹화·지역동맹화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3)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 재편이 가져올 문제점

우선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방위의 경우 한국군이 주된 임무를 맡고 주한미군이 이를 지원하며, 아태지역의 안보위협에 대해서는 미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이 이를 지원한다'는 내용 아래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발맞춘 한국군의 역할 확대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둘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 재편은 한미연합전력구조의 변화와 광역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작전계획과 훈련, 지휘체계, 무기 및 병력구조, 군수·보급체계를 요구하게 될 것인 바, 이는 막대한 국가재정의 군사비로의 전용과 국방비증액을 요구할 것이다.

셋째, 미국이 한미동맹의 재편을 통해 노리는 바가 대북·대중국 포위전선의 구축에 있다고 할 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 재편은 동북아 안보지형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한미양국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해 "동북아 전략구도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중국 인민일보의 보도(2006.1.23)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넷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 재편은 한미양국군의 동북아 분쟁개입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우리가 중국의 적국으로 되어 중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공격의 대상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가 주한미군의 분쟁 개입을 위한 침략기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적, 물질 동원 체제를 갖춘 병참기지로 전략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국민적 저항을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 재편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한미동맹은 주일미군의 작전범위 확대와 이를 천명한 1996년의 미일안보공동성명 이래로 이를 구체화한 미일방위협력지침(1997년), 주변사태법(1999년), 테러조치특별법(2002년), 유사입법(2003년)등을 통해 전평시를 막론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미군 지원을 담보로 하는 미일동맹의 전철을 밝게 될 것이다.

한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한 것은 그것 자체로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에 큰 위협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비전 연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의 한미간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먼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허용은 ‘한미동맹 비전 연구’를 통해 주한미군의 한반도 영구주둔을 합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은 우려는 2월 13일~15일 밤에서 열린 제6차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앞두고 미국이 한미동맹 비전 연구의 내용으로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통일단계를 포함시키고,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재정의 하는 합의(초안)를 우리 정부에 강요하는 데서도 현실화되고 있다.

다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는 것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분쟁5)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의 투입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여기에 한국군을 동원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뿌리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공동성명 발표 직후 윤광웅 국방장관이 ‘통일 이전까지 한국군의 작전범위 확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허용은 대한민국으로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를 아·태지역이라 왜곡하고 있는 미국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한국군과의 공동작전에 관한 미국의 요구를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협상과 관련해서도 지극히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한미군사당국은 제5차 SPI회의에서 “작전통제권 환수가 한미연합지휘체계 연구의 일부임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합의는 한미연합사를 대신할 새로운 한미연합지휘체계, 즉 (동북아) 광역사령부, 한미군사협의기구 등을 전제로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뜻하므로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의 작전범위의 확대를 의미하는 한미동맹 재편은 (동북아)광역사령부 창설과 이에 한국군의 편입을 노리는 미국의 입장과 논리를 한층 강화시켜 줄 뿐이다.

3. 공동성명의 특징과 문제점

1)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 허용

지금껏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하는 노대통령의 발언을 지침으로 하고 있었다. 노대통령은 2004년 11월과 2005년 3월에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개입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강한 톤으로 반대6)한데 이어 2005년 10월 데일리 서프라이즈 창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한국의 입장이 대부분 관철되어 가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은 우선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을 반대’한 노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아래와 같이 ‘한국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로 뒤바뀌었다.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혁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 한다”

이와같이 이번 공동성명은 주한미군의 작전변경의 확대는 전면 허용하되, 한국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개입을 반대하는 한국의 입장이 관철되기는 커녕 동북아 전략구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상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이종석 장관은 이에 대해 “(한반도를) 동북아 분쟁개입을 위한 발진기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입장을 전제로 한 합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동북아 이외의 지역은 물론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도 전면 허용하고 있다. 설령 이종석 장관의 주장대로 그런 (이면)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병사례에서 보듯 감축이나 순환배치 등의 명분을 내세워 다른 지역을 경유해 얼마든지 동북아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므로 그것은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개입을 전면 허용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의 안위와 민족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북아에서의 대결구도의 강화, 곧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으로 대중국포위전선의 구축을 노리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참여정부가 그대로 허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한미동맹의 포괄동맹화 및 대북 공격적 성격의 강화

한미당국은 또한 한미동맹의 적용범위를 “민주적 제도 및 인권 증진, 테러·대량살 상무기 확산 방지” 등으로 넓히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참여정부가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에 대한 군사적 개입과 정권교체를 정당화하기 위한 미국의 논리, 즉 ‘민주주의와 인권 및 법치주의’라는 수사에 포섭되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네오콘과 부시 정권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수사는 한반도에서는 미국의 대북 전쟁과 체제변환을 뜻하므로, 이를 수용했다는 것은 대량살상무기, 인권, 위조지폐를 구실로 미국이 벌이는 대북 압박공세를 허용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고위전략대화 직후인 1월 24일, 그간 대북관계를 고려해 일관되게 거부해오던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 참가요구를 참여정부가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사실에서도 증명되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이 2월 초에 발표된 2005년 4개년 국방계획 검토(QDR)에서 북한을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키는 적대국가로 지목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공동성명의 대북 공격적 성격은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이와 같이 이번 공동성명은 대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평화유지활동 및 재난 관리 등 이른바 ‘전쟁이외의 군사작전(MOOTW)’분야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의 적용범위를 넓힘으로써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적 군사행동을 합법화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의도를 수용한 것에 다름아니다.

이로써 한미동맹은 대북 방어적 성격의 동맹에서 대북 공격적 성격이 한층 강화된 형태로 재편되고, 이른바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한 개념계획 5029를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에 한국이 깊숙이 말려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3)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및 대중국 봉쇄 동맹

이번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의 적용범위를 전쟁이외의 군사작전으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그 적용범위를 동북아, 나아가 세계적 범위로 확대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역할과 목적을 “동북아 평화와 안정”으로 설정하고, “지역 및 범세계적으로 당면한 도전 극복”을 한미동맹의 지향으로 내세운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전략적 목표는 중국봉쇄이다. 미국은 중동과 중앙아시아에 미군 주둔,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재편 및 주일,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그리고 인도 및 파키스탄과의 군사협력 강화, 필리핀, 태국과의 군사훈련 실시 등 좌, 우, 아래 삼면에서 대중국 포위 전선을 구축

하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 허용에 따라 주한미군은 중국·대만분쟁 시 중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는데 1차적으로 투입될 것이며, 주한미군의 변환과 무기체계, 재배치, 향후 전략 등은 모두 중국 포위 전략에 맞춰지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군의 군사임무 전환과 무기체계 도입 등도 상당부분 주한미군의 대 중국 포위 전략에 종속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을 공동의 전략목표로 하고 있는 미일동맹의 재편과 함께 한미동맹의 임무와 역할을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주일미군, 자위대와 함께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대중 포위 전략의 최첨병으로, 한반도가 미국의 대중국 침략의 전초기지로, 한미동맹이 대중국 봉쇄 동맹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일정에 오름에 따라 정전체제에 기초해 성립된 한미동맹을 해소하는 것은 국제법적, 역사적 순리이다.

공동성명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달리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합의하였다.

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용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냉전을 배경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대북 억제와 나아가 대북 점령 및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력과 작전계획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남북간 평화공존과 공영을 의미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평화체제 수립에 조용해 남북간 군사적 대결을 전제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철수해야하며 유엔사, 연합사의 해체 및 한미동맹은 해소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동성명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영구주둔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통일과정을 자신의 헤게모니 하에 관리하고 한반도를 자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미국의 패권전략을 노무현 정부가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형성에서도 미국의 패권 보장

참여정부는 동북아 전략구도에 대해 ‘진영간 대결구도의 해소와 동북아 공동체 질서의 형성’을 주장해왔다.

한미동맹의 대북, 대중국 적대성을 제거하는 것은 노대통령이 설명한 “동북아에 EU와 같은 공동체가 형성되고, 평화와 공존, 공영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미국이 여기에 한축으로 참여해 협력 질서”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다시 말해 쌍무적 동맹관계의 폐기 혹은 그 적대성을 제거하는 것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성명에서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지역 다자안 보협력체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강력한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미국의 패권이 보장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에 합의하고 말했다.

이러한 합의가 6자회담 공동성명의 동북아 나라들 간의 평화와 안정, 공존과 공영을 기본으로 하는 안보협력체제 건설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로써 미국에 대한 독립성을 가지고 동북아 공동체 질서에 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했던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공식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았고, 동북아 균형자론을 후퇴시키려는 미국의 집요한 공작은 관철되고 말했다.

6)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포괄동맹화, 지역동맹화에 관한 한미양국의 합의는 발동

요건은 ‘외부의 위협’, ‘적용범위는 대한민국’으로 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불법이다. 따라서 종속적 한미동맹의 유지에 매달리지 않는다면, 미국의 미군 철수 압력에 굴복해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에 매달리지 않는다면, 비록 세계에서 유례없이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지만 대한민국으로 한정된 그 적용범위를 지킨다면, 얼마든지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일본이 일미안보조약상 주일미군의 활동범위가 극동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들어 미1군단 사령부의 관할 범위를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한 사례에서도 입증된다.

4. 정부와 관변학자들 주장의 허구성

1) “한미양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조화”시킨 것이라는 외교안보당국의 주장은 사실 왜곡
외교부와 NSC는 공동성명에 대한 국정브리핑(2006.1.22)을 통해 “2003년부터 한미연례안보협의 회(SCM)공동성명에 포함되어온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필요성을 존중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우리로서는 한국의 의사에 반하여 동북아 지역에서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포함시킴으로써, 양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성명의 내용은 말 그대로 한국이 동북아 분쟁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미국이 존중하겠다는 것이지 주한미군에 대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세계 주둔 미군의 첨단화, 경량화, 기동화라는 미국의 군사전략을 전면 수용한 것이다.

한미 양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조화시켰다는 외교안보당국자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지금껏 미국이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의 동북아 분쟁개입 곧, 한국군의 기동군화를 요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반대해 왔다는 가정 하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사실이 그렇다면 정부가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의도적으로 은폐해 왔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번 합의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전면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정부가 그간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개입을 막을 방안의 하나로 검토해 온 사전협의제마저 “구체적 상황 발생시에는 한·미 협의 하에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기한데서도 입증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것 이외에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개입을 막을 다른 방도가 없다는 점에서 사전협의제의 한계는 명확하다. 그나마 이마저도 포기한 채 사안별로 처리할 경우 과연 2005년 QDR에 따라 더욱 빈번해질 주한미군의 대 테러분쟁 신속 투입에 대해 어떻게 우리 입장을 관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양안분쟁 개입은 개연성이 낮은 상황에 불과하므로 명시적 절차를 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외교안보당국자의 주장은 주한미군이 양안분쟁에 개입하는 것만 문제고, 역대 중강도, 저강도 분쟁 개입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안이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거나 애써 그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동북아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주범이 미군이기 때문에 그것이 설령 저강도 개입이라 해도 언제든지 중강도, 고강도 개입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것이 동북아 정세이므로 주한미군이 개입해도 우리 국가 안보와 상관없는 그러한 분쟁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합의에 대한 외교부와 NSC의 주장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한미동맹 재편이 이루어진다는 국민의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동맹논의 ->전략대화 ->한미안보협의 회(2+2회의) ->한미정상 간 한미안보공동선언 발표(7) 과정을 뺏음으로써 한미 합의의 모양새를 갖출 것을 주장하는 관변학자들의 제언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국민적 비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2)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에 도움은커녕 위협만 가중시킬 뿐
차두현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의 유출뿐 만이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력의 원

활한 유입 능력 역시 강화될 것이므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리언 라포트 연합사령관 역시 공동성명 합의 직후 전략적 유연성이 허용될 경우 “한반도 위기 시 신속한 증원 전력 전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반도 유사시는 다름 아닌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구실 아래 북한의 지휘부나 핵·미사일 기지와 같은 전략적 거점에 대한 선제정밀 타격을 가하고 북한이 이에 대응함으로써 한반도 전면전으로 발전하는 상황을 말한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는 한반도 우발 사태 즉 북한 정권의 붕괴로 다른 무장집단이 핵과 미사일을 장악하는 경우, 또는 북한에 긴급 재난이 발생해 북한 난민이 대량으로 남한으로 유입될 경우 한미연합사가 이를 방지한다는 구실아래 대북 군사작전을 감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 전력이란 ‘북한 정권 붕괴’, ‘북한군의 괴멸적 타격’을 목표로 대북 선제 공격적 내용을 담고 있는 한미연합 작전계획 5026, 5027, 5029에 따라 증원되는 전력에 불과하다.

따라서 차두현과 라포트 사령관의 주장은 미국에 의해 주도적으로 작성된 작전계획과 그에 따른 증원전력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한반도 전쟁발발 위기를 고조시키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5. 시민사회진영의 올바른 대응방안

1) 공동성명은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 되는 것으로 원천 무효임

공동성명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북한 위협에 대한 방어 및 주한미군의 활동범위와 발동요건과 관련된 규정을 사실상 위배하고 있고 이와 충돌하고 있다. 그런데 공동성명은 외교부 당국자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힌 것처럼 어디까지나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며 “양국간 이해를 공동 성명의 형태”로 담아낸 것이므로 한미상호방위조약보다 상위의 규정성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모순되고 충돌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한미동맹 재편에 관한 합의는 법적인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설령 미국이 이번 합의를 근거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주장한다하더라도 주한미군 전력적 유연성은 평화주의 원칙에 관한 헌법 제5조에 위배되므로 이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또한 전략적 유연성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압력 여부, 이면합의 여부 및 보고누락 등 협상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FOTA, SPI, 12차례에 걸쳐 진행된 협상에 관한 회의록과 협상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는 한편 국민을 배제한 채 밀실에서 협상을 강행한 이유와 배경을 밝혀야 할 것이다.

2)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소파, 주한미군주둔경비지원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전시지원협정을 전면 개폐해야

주한미군의 일방적 주둔권 등 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각종 독소 조항의 폐기,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을 남한 방어로 명확히 한정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에 대한 기지 및 시설제공, 이동, 훈련, 작전, 병력과 무기의 반입·반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권 확보로 주권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소파, 주한미군주둔경비지원협정, 전시지원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등의 전면 개폐 투쟁은 한미동맹의 불평등성을 온존시킨 채 한미안보공동선언 등의 편법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관철시켜 나가려는 한미당국의 기도를 저지하는 투쟁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뒷받침하는 국방개혁기본법, PKO 관련법, 국가동원법 등의 입법저지 투쟁에도 힘 써야 한다.

3)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면 환수해야

한미당국은 한미동맹 재조정과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을 2008~2010년 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따라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미군 재배치가 굳어지기 전에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 재편에 관한 자주적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는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시기를 늦추면서 또다시 자국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작전권환수 협상을 이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유엔사, 한미연합사는 해체되어야 하며 한국의 작전통제권을 제약하는 관련 각서 및 약정, 협정을 모두 폐기하고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아태지역으로 확장하려는 미국의 기도를 막아내기 위해 한미군사협의기구 등의 지역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어떠한 형태의 협의기구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4) 평택기지 확장 저지 투쟁에 힘써야

주한미군의 기동군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한반도가 대북선제 공격 및 대중국 포위의 전초기지, 병참기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그대로 강행될 경우 신속기동군으로 재편된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려는 유혹은 그만큼 강렬해질 것이며, 한국이 여기에 끌려들어갈 가능성도 그 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용산협정, 반환되는 기지 환경 오염문제, 주한미군의 직도 및 영월 필승 사격훈련장 이용문제, 광양항과 제주 화순항, 대북선제 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위한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주민들과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직접 부딪히고 갈등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투쟁을 집중하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저지하기 위한 고리로 삼아야한다.

5) 한미동맹 해소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으로 나아가야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정전체제를 배경으로 태동한 것으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해소하는 것이 국제법적·역사적 순리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국제법적으로 정전체제 관리를 주 임무로 하는 유엔사는 해체되어야하며, 남북간 군사적 대결을 전제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도 철수하고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따라 해소의 길을 밟아나가야 한다.

또한 그간 우리 국민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감내해왔던 유일한 이유가 이름뿐이지만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안보심리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한미동맹은 주한미군의 기동군화와 이에 상응한 한국군의 기동군화,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강요함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도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주한미군의 주둔을 감내해야 할 이유가 없다.

통일부와 NSC에서 남북군사회담의 진전을 위해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검토하다가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강력한 반발에 때문에 이를 취소했다는 사실은 한미동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군축·평화 협정으로 이루어지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시대적, 민족적 과제를 달성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이제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 및 한미동맹을 해소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1) 이글은 2006년 2월 1일 임종인 의원실 주최로 열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발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2)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6. 2. 17

3) 한국일보, 프레스안 2006.2.15

4) 한국일보, 2006.2.15

5) 제3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2003.7) 한국 측 준비회의 문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역외

투입시나리오를 재난구호, 해양수색, 구조 활동 등의 저강도, 분쟁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평화유지·강제 활동, 지역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응징,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역내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압박 등의 중강도, 중국 등 잠재 지역 패권세력과 역내 여타 국가들 간의 분쟁 개입, 중국과 대만 간 양안 갈등 시 군사적 조정 등을 고강도 전쟁으로 구분하고 있다.

6) “전략적 필요에 의해 주둔군 수를 줄이고 늘리는 문제는 미국이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게 한국이 협력해야 하지만 내가 말한 융통성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역할의 유연성을 의미하지 않는다”(2004.11, 미국 국제문제협의회 연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문제되고 있는데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며, 이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다”(2005. 3. 공사졸업식 연설)

7) 한미동맹의 비전 : 동맹선언의 모색, 윤덕민, 김성한, 2004.9.30

1. 현황

1) 정부의 움직임

토지보상금에 대한 공탁과 동시에 작년 12월 22일을 수용개시일(강제철거 가능 시점)로 고시한 정부는 확장대상지역에 대한 표지작업 등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상반기에 주민 이주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기반공사를 개시한다는 방침에서 후퇴하여 올해 말까지 주민 이주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일시에 전면 철거에 들어가는 것은 정부로서도 부담이 클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립·와해작전을 구사하면서 점진적으로 철거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를 들어 협의 매수된 가구에 대한 퇴거 요구, 빈집 철거, 대추분교 접수, 수로차단, 경계 표시 또는 철조망 설치 등의 방식으로.

마지막 수순으로는 행정대집행(강제철거) 계고, 행정대집행 시기·책임자·비용·견적액 통지(위급시 생략 가능)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현재 정부는 마을 입구에 국유재산 표시와 경고 팻말을 설치한 바 있으며, 개별 가구마다 국유재산 사용(경작) 금지 안내 통지를 보냈고, 대상지역에 대한 측량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등 장미빛 평택 개발계획을 발표하여 평택 여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대추리 일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를 결정하였다. 이 결정의 근거가 된 지표조사결과보고서는 기지 확장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와 생태계를 보존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현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기지확장 사업이 일정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2) 주체현황

트랙터 순례, 2월 12일의 3차 평화대행진 등을 계기로 평택미군기지확장 문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트랙터 순례, 주민등록증 반납투쟁 등으로 사기가 올라간 주민들은 철거를 강행하려면 해보라는 식으로 결의에 찬 태도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런 주민들의 태도에 초조한 쪽은 오히려 국방부인 것 같다. 그들은 사회단체의 빈집 입주가 계속되자 이사가는 주민들에게 집을 부수고 가도록 사주하고 있으며, 3차 평화대행진 때 마을의 빈 교회에서 대행진 참가 개신교 단체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직전에 몰래 교회 마루를 다 뜯어놓는 등 야비한 방식으로 우리의 투쟁을 방해하고 있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 범대위)는 3차 평화대행진 등 각종 집회를 개최하고 문화재 지표조사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빈집 입주와 텐트촌 건설, 각급 단위의 교양과 조직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평택 범대위는 이를 통하여 강제철거에 맞서는 평택지킴이를 모집하고 올해 농사를 반드시 짓겠다는 계획이다. 평택 범대위 소속의 평택시와 경기도 지역 단체들은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기지확장 및 강제토지수용을 반대하는 10만인 선언운동을 진행 중이다.

한편, 미군기지 배후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국제화계획지구’에 포함된 고덕면 등지의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팽성 주민들과 연대하여 미군기지확장반대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지난 3차 평화대행진 때는 400명이 넘는 고덕 주민들이 행사에 결합하기도 하였다. 정부로서는 새로운

부담이 생긴 것이다.

2. 투쟁방향과 과제

1) 평택기지 확장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영구주둔 물적 토대 마련을 위한 것임을 널리 알려 양 측면의 투쟁이 상승 발전하도록 한다.

지난 1월 19일, 한미 외교부장관이 전략대화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즉 아시아·태평양 침략군화(아·태 침략군화)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에 합의했다. 이는 당초 노무현 대통령의 주한미군 동북아분쟁 개입 반대 입장에서 결정적으로 후퇴하여 주한미군의 아·태 침략군화를 전면 허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마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전세계적 범위에서 침략 동맹으로 전환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다.

또한 2월 14~15일, 광에서 열린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는 관련 내용이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이른바 ‘미래 한미동맹 비전’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 핵심 내용은 냉전 와해와 남북 관계 진전, 남한의 군사력 우위 등으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유지 필요성에 대한 안팎의 의문이 제기되는 조건에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통일 이후에도 유지하고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통하여 미국이 한반도 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아·태 침략군화 및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주한미군 주둔 및 한미동맹의 영구화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통하여 그 물리적 토대를 확보하게 된다. 평택기지 확장은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를 뒷받침하는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측면의 투쟁은 밀접한 연관 속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이 두 투쟁은 내용과 동력을 함께 확보하면서 통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호는 “전략적 유연성 뒷받침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주한미군 영구주둔 노리는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강제철거 저지투쟁과 농사투쟁을 결합시킨다.

올 해 투쟁은 경찰과 용역깡패를 동원한 정부의 강제철거를 막는 투쟁을 한편으로 하고, 농사를 짓는 일을 또 다른 한편으로 하는 투쟁으로 집약될 것이다.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서는 현지에 들어가서 주민들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정부의 각종 침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평택 범대위에서는 이사가 가는 주민들의 빈집을 채우는 운동, 텐트촌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현지에 일상적으로 상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1회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계기별로 기행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매결연 프로그램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주민의 절박한 현실을 이해하고 투쟁에 대한 의지를 높이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활동들을 바탕으로 해서 강제철거가 본격화될 때는 총력을 다해 직접적인 철거저지투쟁을 조직적으로 벌여야 할 것이다.

올 해 농사를 짓는 것도 주요 투쟁과제 중의 하나다. 사실 기지 확장 대상 면적의 대부분은 논이다. 또 먼저 침탈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곳도 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해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기지 확장을 막는 주요 투쟁이 되는 것이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지역 내 국유재산 사용(경작 등) 금지 안내 통지>를 보내는 것에서 예견되듯 정부는 농지에 대한 진입 방해, 농지에 대한 자갈 투입, 수로 차단 또는 파괴 등을 통하여 농사투쟁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마을은 물론 농지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 등을 통해 정부의 농사 방해를 막아내는 한편, 실제로 농사를 짓는 투쟁을 주민과 평택 범대위의 집단적이고 창조적인 힘을 동원하여 승리

로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택 범대위는 3월 평화의 논갈이, 4월 평화의 못자리, 5월 평화의 모내기 농활을 전개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농의 각지역 조직들이 적극 결합할 예정이다. 이는 트랙터 전국 순례의 성과 중 하나다. 우리도 농사투쟁에 적극 결합하여 농사를 통한 기지 확장 저지에 한몫해야 할 것이다.

3) 부지 성토(盛土), 환경오염 복구비용 등 협정 및 그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

미국은 100년 이상 가는 튼튼한 기지를 짓겠다면서 홍수 예방을 위해 대상 부지를 2.6~3.3m 이상 성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5,000~6,000억원에 이른다든 비용부담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또 정부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다면서 성과로 자랑하던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복구비용 최소 5천억 원 중 대부분도 우리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30~40억 달러 쯤 된다면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용산기지 이전비용도 50~55억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고 실무총책이었던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최대 2조원이 될 수도 있는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관련 비용도 새로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때, 오는 6월 경에 용산기지 이전 시설종합계획(MP)이 나와 봐야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있겠지만 평택특별법, 반환기지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 이전 관련 직간접비용 총계는 15조원 안팎에 이를 수도 있다.

더욱이 한미양국은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사령부의 해체 또는 축소, 하와이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존계획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한미양국은 이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불법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군 재배치 과정에서 술한 문제들이 터져 나올 것이다.

문화재 보존문제 등과 함께 이런 문제들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들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국민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한미양국을 압박함으로써 주민이 주 완료시기를 6개월 연장시킨 '절반의 승리'의 여세를 몰아 기지 확장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켜야 할 것이다.(2006. 2. 17)

비정규직 싸움의 현장 한복판에서 선 사람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서훈배 위원장

바람이, 장난이 아니다.

오리털 코트와 목도리, 마스크로 무장을 했지만 버스에서 내려 잠깐 걷는 5분을 참기 힘들었다.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근처의 대교본사 앞, 안팎의 기온차로 얼음이 서걱서걱 끼어있는 한 겹짜리 비닐 천막은 매서운 추위를 막기엔 턱없어 보였다.

그러니까 최근한 눈높이 선생님이 해고통지를 받은 게 작년 12월 말이다. 해고 사유는 ‘회원감소’였지만 실은 12월에 있었던 대법원의 ‘학습지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는 판결을 등에 업은 노조탄압이었다. 그는 학습지노조 대교지부장이었다. 학습지노조는 1월 13일 ‘해고협박 중단’, ‘노조탄압 중단’, 구호를 걸고 대교 본사 앞에 천막을 쳤다.

서훈배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평통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런 내용들이 꾸준히 올라오면서였다. 그리고 평통사 회원으로 가입한지 얼마 안되었을 때 국회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작년 가을의 그를 기억해냈다.

농성이 일상사업이냐구?

늦은 아침식사 시간, 왁자지껄 맛나게 밥 먹다가 지지방문 온 누군가가 묻는다. “학습지노조가 장기투쟁사업장이야?” 순간의 정적 후 서훈배 위원장이 어이없어 하며 대답한다. “그럼, 6년 짜 장기투쟁 중이지. 맨날 농성하고 있으니까 이젠 이게 일상사업으로 보여?” “하긴 지금은 100일짜리 투쟁사업장은 장기투쟁 축에도 못 들지...” 다시 이어지는 잡담 속에 묻혀 버렸지만, 학습지노조가 만들어진 2000년 이후 6년째 계속되는 투쟁의 고단함이 느껴졌다.

아침 식사 후 짧지만 긴장감 있는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날은 최근한 선생의 재계약 기한 마지막 날. 사실상 해고상태에 들어서는 날이었다. “설령 대표이사 면담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우린 우리 중심을 틀어쥐고 가야 해요. 소식지나 만드는 조합이 아니라 20일 이상 계속된 농성의 성과를 조합원들에게 알려내고 함께 가는 게 중요해요. 이젠 ‘노동조합인정’과 ‘원직복직’ 구호를 걸고 길게 가야 합니다”

“회사가 교육기업이잖아요. 회사가 굉장히 약해요. 괜히 불거져서 여기저기 소식이 알려지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농성 천막도 그냥 놔두고 다 법대로 하자고 해요. 대법 판결도 로비하고 해서 다 유도하는 거거든요. 교육기업이지만 전형적인 자본의 모습이에요. 사법부를 자기편으로, 하수인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은 법대로 하자고 해요. 겉으로는 순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는 거죠. 아마 좀 있으면 손배 가압류도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은 노조 지부장까지 해고하는 판에 노조의 사활이 달린 문제인데 물러 설수 없죠. 그거 각오하고 판 벌린 거죠”

이번 농성투쟁은 한 조합원의 해고통지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전략적 과제인 ‘노동자성을 쟁취’하지 않고서는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대법원 판결은 황당 그 자체! : 우리가 노동자가 아니라니...

골프장 경기보조원, 화물차 및 덤프운전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이나 도급계약을 회사와 맺는 이들은 이를 이유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도 적용받지 못한다. 매년 재계약을 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이들의 이름은 비정규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현실에 놓인 노동자들이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위장 자영업인이에요. 회사에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위탁, 도급계약으로 자영업화 시켜놓은 거죠. 회사는 핑퐁고 알먹고 인 셈이죠”

서훈배 위원장은 IMF가 터지기 전에 보험회사를 다녔다. “재밌는 것은 그때 제가 주로 골프장 경기보조원, 백화점 판매원, 학습지교사들의 단체보험을 많이 했어요. 회사에서 해주는 보험이 없으니까 민영보험으로 단체보험을 많이 하는 거죠” 그때 서위원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특수고용직인줄도 몰랐다고 한다. 당연히 자영업자라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나중에 학습지교사 일을 하다 보니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같이 일하는 여선생님이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산재도 안 되고 그냥 관두라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이렇게까지 일방적일 수 있나... 기계로 쓰다가 쓸모가 없어지니까 버리는 거잖아요. 기계는 고쳐서 쓸 생각이라도 하잖아요. 아예 한번 써서 버리는 소모품 취급을 하는 거죠.”

노동자가 아니니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도 갖지 못한 이들. 그렇다면 이들의 조직인 학습지노조도 불법인가? 아니다.

지난 1999년 재능교육교사 노동자들의 완고한 투쟁으로 이들은 노동조합설립필증을 받았다. 위탁계약신분에도 노동자임을 인정받고 조합건설을 승인 받은 것이다. 2000년에 출범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도 엄연히 합법적인 노조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사측은 당연히 자신들에 유리한 법원의 판결을 들고 학습지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응당한 노조의 권리인 교섭에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나라 사법부와 노동부가 입장을 다르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국가기관인데 노동부에서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중재, 조정도 하고 하는데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해서 우리가 고소를 하고 재판에 가면 사법부에서는 우리보고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본질적 문제예요. 노조는 노동자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보고 노동자가 아니라니...”

게다가 학습지교사의 경우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정규직 노동자였다. 90년대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회사측은 노무관리 차원으로 위탁계약을 도입하였고, 지금은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도 부정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비정규직 싸움은 노동운동의 성패를 가름하는 문제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시키고 노동조합을 만드는 등 사회의 주요세력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폭발적인 노동운동의 상승으로 전노협과 민주노총을 건설하였고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흘렀다.

그러나 그동안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자의 위상이 높아지는 소중한 성과들은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한정될 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과 상대적 박탈감, 사회적 신분의 하락이 현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힘 모아서 사회 양극화를 해결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 투쟁의 절실함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위원장은 비정규직, 그중에서 더 힘든 조건의 특수고용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명의식 같은 게 있다고 했다. 그는 향후 노동운동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이라고 본다. 학습지노조 위원장으로서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책임감과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불과 2-3년 만에 새로운 노동운동흐름의 주체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고 있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2006년 현재 노동운동을 이끌어어나가는 사람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에요. 물론 전체 노동운동의 대의구조는 정규직이나 대공장 위주지만, 실제 현장에서 투쟁을 선도하고 노동운동을 이끌어가는 부분은 비정규직 운동이라고 봐요. 물론 정규직 동지들이 전체 노동운동을 고양시켰던 성과들을 인정하고 계승하면서 가야죠”

“힘들다고 관두면 비겁한거 아니에요?”

학습지노조에는 노조전임자가 없다. 서위원장 자신도 1주일에 한번은 서산으로 내려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노조간부들은 아이들 수업이 끝난 밤 10시 이후와 주말에 노조일을 한다. “학습지노조를 올빼미노조, 주말노조라고 해요. 어떤 날은 밤새 회의를 하고 잠도 못자고 다시 일을 하러 가야 하죠. 노조 인정도 못 받지, 경제적으로도 힘들지, 체력적으로 그로기 상태가 되요” 그래서 이들에겐 가족의 지지, 지원이 커다란 힘이 된다.

“이거 꼭 써줘야 해요. 너무너무 훌륭한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아내도 같은 학습지교사였다가 지금은 공부방교사로 있죠. 제가 지금 낙달재 천막 생활 중인데, 아내가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많이 힘들 텐데 저에게 엄청난 도움을 줘요. 지난번 단식할 때나 힘들 때마다 ‘힘들다고 해서 관 떠나면 비겁한거 아니냐’고 아내가 격려를 해 주죠.”

올해 나이 38살, 그 또래들이 다 그렇듯 그 또한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운동을 시작하였지만, 복학과 졸업과정에서 마음 한편에는 동료들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었다.

“많이 힘들때는 학생때 가졌던 막연한 신념이나 의리 같은 게 힘이 되요” 학습지노조 충청지회 사무장, 충청지회 지회장, 대교지부장, 학습지노조 위원장으로 단계별로 승진한(?) 서위원장은 현장출신 지도자답게 현장 동지들의 대한 의리, 운동선배들에 대한 의리, 가족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농성장을 사수하고 있다.

“저는 평통사 세모회원이예요”

“사실 노조활동 하다보면, 내 부문의 운동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다른 것들은 많이 놓치고 가요. 예전에 이수정 동지(학습지노조 선전국장, 평통사 회원)가 평통사에서 나온 이거(평화누리통일누리)를 읽으라고 주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다 작전이었어...(웃음) 평택 미군기지 문제였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두세 번 밑줄 그으면서 읽었죠. 대중국 포위니, 전략적 유연성이니,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렇게 읽다 보니 아, 이래서 기지가 확장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감이 생기는 거죠. 모르는 거 물어주는 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지적욕구로 시작됐는데. (이수정 동지가) 한 권 더 주길래 읽었더니 지금은 통일이나 미국문제에 대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회원가입을 하고 회지 받아보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그는 작년 가을에 평통사 회원이 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학습지노조운동을 하다보니 평통사 회원활동엔 한번도 참여 못했단다.

“회원으로 치면 세모회원쯤 되나? 완전 동골뱅이 회원은 못 되고...” 머쓱하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다.

평통사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바람은 있다.

“평통사가 주로 정치군사적인 얘기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물론 그런 정치군사적 내용들은 노동자들의 신자유주의 투쟁이나 농민들의 반세계화, 식량주권의 문제와 다 연관되어 있다고 봐요. 하나의 큰 흐름, 전 세계적인 반세계주의 운동, 반미운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현장에 있는 사람

들은 자기 얘기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 같아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각각 현장의 운동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총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평통사의 내용도 더 풍부해져야 한다고 봐요.”

“평택 기지이전 문제 문제만 하더라도 심정적 동의라는 게 있으니까 팔뚝질은 같이 할 수 있죠. 하지만 노동자, 농민들도 큰 틀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밑줄 그으면서 읽은 그 글을 서산에서 농사짓는 제 후배에게 읽어보라고 권해줬죠. 사실은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수정동지가 했던 것처럼... 하하하”

오미정

현실로 드러나는 용산기지 이전협정 및 LPP 개정협정의 문제점

미군문제팀 국장 이형수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기지 이전협정(이하 용산협정) 및 LPP 개정협정(이하 LPP협정)이 국회에서 통과한 지 1년이 넘었다.

용산협정 및 LPP협정은 용산기지 및 경기 북부지역에 있는 미 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주한 미군 재배치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은 미국이 자국의 세계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해외주둔 미군재배치 사업(GPR)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미국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하 아시아·태평양 침략군화)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1월 19일 한미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가 전격 합의되었다. 용산협정 및 LPP협정을 통해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에 대한 물적 토대를 확보했던 미국으로서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에 대한 명분마저 얻게 된 것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목표가 북과 중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3일 발표된 미국의 2005년 QDR(4개년 국방전략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목표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QDR에서 북을 '잠재적 적대국'으로 중국을 '기रो에 선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의 군사전략이 대북 선제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포위·봉쇄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인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는 우리 국민과 민족의 운명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용산협정 및 LPP협정이 첫 단추부터가 잘못 꿰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주한미군 아태침략군화를 위한 재배치 비용의 94%를 부담하고 대북 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위한 전진기지를 확장하기 위해 농민들의 땅을 빼앗을 수 있는 협정의 내용은 전면 무효화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서 협정의 문제점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협정이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의사와 무관한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라는 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에 현실로 드러나는 용산협정 및 LPP협정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정부 문서 확인 -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가 아닌 한국의 요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용산기지 이전에 따르는 비용 전액과 대체부지를 제공키로 한 굴욕협상이 국민적 반대에 직면하자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라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한 논리였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이 입수해 일부 공개한 작년 4월 1일 청와대 국정상황실 보고서1)는 정부의 이러한 논리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거짓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NSC(국가안전보장회의/용산 및 LPP협상을 총괄한 정부 부서)가 미국의 설명을 통해 용산기지 이전이 해외주둔 미군재배치 사업(GPR)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와 연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보고서는 NSC가 용산협상이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국내적 비판 여론이 비등해질 것을 우려해 먼저 용산협상을 마무리 한 다음 아태침략군화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

도록 관련 정책과 협상 전략을 짰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써 용산기지 이전이 결국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인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와 직접 연계되어있었다는 점에서 한국이 용산기지 이전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전비용 전액과 대체부지를 제공키로 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더욱이 용산 및 LPP협상을 주도했고 관철시켰던 NSC가 미국의 의도를 알고도 협상에 반영하기는커녕 한국측 요구라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였다는 점에서, NSC를 비롯한 협상단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청와대 국정상황실 보고서가 폭로된 후에도 여전히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정부가 무조건적인 부인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것이다. 결국 국민적 힘으로 용산협상 및 LPP협상 관련 회의록(FOTA 회의록) 등이 날날이 공개돼 협상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복구 비용 미국이 전부 부담한다더니...

2004년 12월 9일 용산협정 및 LPP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된 후, 2005년 1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의 만찬에서 “기존합의를 뒤집기는 부담스러웠지만 환경조항을 새로 추가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은 용산 및 LPP협상을 진행했던 협상단(NSC, 외교통상부, 국방부)의 발언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협상단은 줄곧 용산협정 및 LPP협정에 ‘SOFA 및 관련합의에 따라 환경문제를 처리’하기로 한 환경조항이 신설된 것은 커다란 성과이며, 반환 미군기지(이하 반환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복구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는 외교통상부가 작성한 2004년 10월 19일 <용산기지이전협정해설>이라는 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외교통상부는 “2003년 환경절차합의 등은 미측의 정치적 노력 또는 Policy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어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치유 부담을 한국측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평통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기지 오염은 미측이 치유비용을 부담키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조차 협상단의 주장을 강력히 반박하며, 협상을 제대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2003년 11월 18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그 중 반환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복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이 보고서에서는 “(협상단이 주장하는) 기존 SOFA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환경문제를 처리한다는 방안은 개선된 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실제 기지이전 시 우리 측이 막대한 환경치유 부담을 떠안게 됨으로써 심각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안으로 “(SOFA체제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협정을 통해 미측에 실질적 환경 치유 부담을 갖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이를 협상단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하게 된다. 또한 환경부도 2004년 8월 14일 열린 용산기지 이전 관련 관계부처 회의2)에서 “미국 측이 올해 반환예정인 부지협상에서 치유에 소극적인 바 용산기지 반환 한미합의서 작성 시 이를 고려해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협상단은 평통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 심지어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환경부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용산협정 및 LPP협정의 국회 비준을 받는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작년 1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민정수석실 산하에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있음)은 2003년 11월에 이어 2번째로 용산기지 관련 보고서3)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협상단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게 미국이 반환기지 환경오염 복구의 책임을 한국 측에게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주간동아가 보도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산협정(및 LPP협정)이 미군의 환경치유 책임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해 막대한 반환부지 환경복구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협상단이 환경관련 조항 신설을 성과라고 설명했던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된 지 1년도 안돼 노무현 대통령과 협상단이 협정의 최대 성과라고 했던 ‘반환기지에 대한 환경복구 비용 미국 부담’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최소 5천억 원에 이르는 반환기지 환경복구 비용 대부분을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환경부가 2005년 반환 예정기지(훈련장 포함) 22개중 15개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했고 14개 기지의 토양과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는 사실⁴)이 밝혀졌다. 특히 춘천 캠프페이지의 경우에는 국내 토양이나 수질기준을 최고 100배 이상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있으며, 그중에는 발암물질로 분류되거나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는 오염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런 심각한 오염에 직면한 14개 반환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복구비용은 환경부 추산으로도 최소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2011년까지 반환될 예정인 기지가 총 62개이고, 아직도 조사를 하지 않은 기지가 47개나 된다는 점에서 반환기지 환경복구 비용의 규모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이다. 이는 용산기지와 50년 동안의 폭격으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을 매향리사격장이 47개 미조사 기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다.

용산기지의 경우 환경부는 지난 2004년 4월 오염복구에 막대한 복원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환경부가 NSC에 제출하기 위해 만든 대외비 보고서 <환경오염 및 복원 비용 보고서>⁵)에 따르면 전체면적의 60%를 공동조사 대상으로 하고 이중 5%가 오염됐다는 가정 하에 복원비용을 산정했는데 93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반환기지 환경복구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최소 5천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가량이 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협정 체결 이전 ‘반환기지 환경오염 복구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던 소리는 언제 했느냐는 식으로, 이제는 미국이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는 선에서 반환기지 환경복구 문제를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정부가 ‘대국민 사기극’에 대한 사과도, 협상담당자들에 대한 문책도, 재협상을 통해 환경복구 비용 전액을 미국이 부담하게끔 하려는 정치적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채 또다시 국민을 철저히 우롱하고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가 이 문제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반환기지 환경복원에 대한 책임을 미국이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후안무치한 태도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반환기지 환경복구 비용을 우리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국제법적으로 환경복구는 오염자가 부담해야한다는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원칙에 따라 미국 부담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민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고 할 수 있겠다.

미국의 날강도적인 요구 - 평택 기지에 대한 성토(盛土) 문제

평통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용산협정에 이전비용 총액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미국에게 ‘백지수표’를 준 꼴이라는 비판을 했다. 그 이유는 총액을 명시하지 않고 협정을 체결하면 나중에 미국이 ‘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이라는 원칙을 들먹이며 부당한 요구를 할 것이고, 현재의 정부가

이런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막아낼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에서 이전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MP(마스터플랜)가 나와 봐야 구체적인 액수가 드러나겠지만 이전비용은 30억~40억 달러 선에서 해결될 수 있으며, 협정문에 '한미양국이 이전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평택 캠프험프리 기지(확장 예정 부지까지 포함해서/이하 평택기지)에 대한 성토(盛土/흙을 쌓다)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평통사와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월 8일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평택기지의 부지가 홍수에 잠길 가능성이 있다'면서 '평택기지를 2~3m 더 높이는 성토 작업을 해달라'고 지난해 11월 요청해 와 검토 중"이라며, 성토 작업이 진행된다면 약 5천억 원~6천억 원 가량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미국의 평택기지 성토 요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평통사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과 비교해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는 미국이 '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을 근거로 날강도적인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평택기지에 홍수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제방을 튼튼히 쌓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다. 만일 미국이 이전비용을 부담키로 했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을 지가 의문스럽다.

둘째는 국방부가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성토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바로 다음날 타당성 조사를 한미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는 국방부가 미국의 요구에 끌려 다닌다는 단적인 예가 아닐 수 없다.

셋째는 국방부와 정부가 평택기지 성토를 미국 측에 약속해놓고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국방부가 평택기지 성토문제를 작년 11월에 미군이 요청해와 알았고, 성토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 한미양국이 확장이전 대상 부지의 지형 조건에 대한 검토 없이 부지 선정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정황들로 미뤄볼 때 평택기지 성토문제도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평택기지 성토문제는 불평등한 협정을 빌미로 미국이 요구하는 부당한 요구 중 하나이기에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전비용

국방부가 용산협정 및 LPP협정이 체결되기 이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 제출한 자료6)에 따르면 이전비용은 용산이 3조 9570억 원, LPP가 1조 5140억 원으로 총 5조 4710억 원 규모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용산협정 및 LPP협정은 독일 라인마인 미군기지 이전사업과는 달리 이전비용 총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전비용 액수가 단지 추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평통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구멍 난 독에 물 붓기', 미국에게 '백지수표'를 준 꼴이 될 수 있다며 이전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소 5천억 원이 소요되는 반환기지 환경복구 비용과 평택기지 성토비용 5천억 원~6천억 원이 정부가 추산하는 이전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지는 불분명하다. 만일 이 비용을 한국 측이 새로이 부담하게 된다면 정부가 추산했던 이전비용보다 최소 약 1조 원가량이 늘어나게 된다. 이 사실만으로도 정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날강도적인 요구가 비단 반환기지 환경복구 비용과 평택기지 성토 비용에서 그치겠냐는 것이다. 결국 이전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6월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MP(마스터플랜)가 발표될 예정인데 파장이 만만치 않

우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이전비용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있다.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이 요구했기 때문에 한국이 대체시설 비용을 부담하고 미2사단 이전은 미국이 요구했기 때문에 미국이 대체시설 비용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미국이 부담하는 액수를 약 2조1240억이라며, 마치 미국이 이전비용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미국 자료를 통해서도 이전비용의 94%를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작년 3월 8일과 10일 리언 라포트 前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와 미 하원 세출위원회 증언7)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총 8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중 미국 부담은 단지 6%(4억8000만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리언 라포트는 "주한 미군을 항구적인 시설로 이전하는데 80억 달러가 들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현재 분석에 따르면, 한국 정부 부담은 전체의 53%(42억4000만 달러), 민간 업체에 의한 임대 건물 건설 투자금(private industry-financed build-to-lease investment)이 20%(16억 달러),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이 21%(16억8000만 달러), 미군 시설 예산 6%(4억8000만 달러) 등이다"라며,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은 한국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이전비용의 94%를 한국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이 미국 돈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산협정 및 LPP협정은 술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이미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던 것들이다. 단지 지금 이 순간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협정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 즉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불평등성과 미국의 부당한 요구가 개입되어 있다.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이며 정부의 거짓말로 얼룩진 용산협정 및 LPP협정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미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앞으로 용산협정 및 LPP협정을 전면 무효화하고 평택기지 확장을 저지하는데 온 국민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가 결과>보고서에서 "실제 기지이전 시 우리측이 막대한 환경치유 부담을 떠안게 됨으로써 심각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의 2005년 반환예정기지 환경오염 실태조사 15개 중 14개 기지의 토양과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1) 프레시안 2006/02/03, 황준호 기자 '[공개] 국정상황실 점검문서 ... '자주국방론'의 실체는?'
- 2) 세계일보 2004/11/16. 특별취재팀 'SOFA 따를 경우 환경치유 비용 1000억원 한국이 떠안을 판'
- 3) 주간동아 2005/12/04, 황일도 기자 '미군기지 반환 민정 vs NSC'
- 4) 한겨레 2006/02/08. 성한용 기자 '반환 미군기지지터 중금속·기름 범벅'
이 기사는 환경부가 작년 10월 4일 작성한 '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후속 쟁점사항 및 향후대책' 문서를 통해서 작성되었다.
- 5) 세계일보 2004/11/16. 특별취재팀 '용산기지 5% 오염때 정화비 1000억, 한국서 떠안을 판'

6) 통외통위 '용산기지 이전협정, LPP개정협정' 검토보고서

7) 오마이뉴스 2006/01/25. 김태경 기자 '우린 6%만 부담해도 한국은 높이 평가'

6차 SPI 대응 캄 현지투쟁
캄에 울려 퍼진 팽과리소리

2월 13일(월)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캄에서 6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한 평통사는 이번 회의가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한 한미 고위전략대화과 맞먹는 중대한 회의라고 판단하고 회의가 열리는 캄 현지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를 특히 주목한 것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당국이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에 관한 초안을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박석분 국장, 유홍 국장, 조광수 전북평통사 사무국장으로 긴급히 꾸려진 현지투쟁단은 이를 만에 준비를 마치고 12일 밤, 1차로 유홍 국장과 조광수 국장이 먼저 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허브라고 불리어지는 캄. 유사시 캄에서 출격할 미군 전폭기가 한반도로 날아올 수 있다는 바로 그 하늘 위를 날아 캄으로 가게 되니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었다. 다행히 캄 현지의 평화운동가 테비와 이메일과 전화통화를 통해, 현지 활동가들이 공항에 마중을 나오고, 평통사의 현지투쟁을 돕겠다는 너무 고마운 소식을 출발 전에 전해 받았다.

13일 오전 1시 40분 캄에 도착한 대표단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출국심사를 마치고 세관을 통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세관원이 대표단을 지목하여 정밀검색을 받게 되었다. 다 풀어 헤쳐진 대표단의 가방. 공항세관원이 보도 자료와 성명서 현수막 등을 유심히 보더니 일부를 가져가서 상급자에게 문의를 한다. 상급자가 윗선에 연락을 하더니 대기하라고 한다. 30분여를 대기했을까? 세관원이 유홍 국장을 부르더니 이민국으로 가자고 한다.

이민국으로 간 유홍 국장이 다시 30분여를 기다리니 이민국 직원이 인터뷰를 하자고 한다. 캄에 온 목적이 무엇이나, 한국에서 체포된 적이 있느냐, 평통사에서 몇 년 일했느냐 등을 묻더니 자신의 상급자의 지휘를 받는 눈치이고 다시 기다리란다. 한참을 기다리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자신들은 판단하기 어렵고 다른 곳에서 누군가가 와서 인터뷰를 할 거란다. 다시 한 시간 반 정도를 기다리니 웬 백인이 인터뷰를 하잔다.

자신의 신분을 FBI라며 신분증을 제시하더니 이것저것 물어본다.

그의 책상위에는 언제 뽑았는지 평통사 영문홈페이지에 있는 일본평화대회에서 유홍 국장이 발표한 글이 사진과 함께 놓여져 있다. 유홍 국장은 정면 돌파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캄에 온 목적과 활동내용에 대해 보도 자료에 있는 대로 얘기를 하며, 캄에서도 평화적이면 정해진 구역에서 얼마든지 데모를 할 수 있다고 들었다고 했더니 그렇다고 한다. 그가 주로 관심을 보인 것은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일본에서는 어떤 내용이었냐, WTO 데모와 유사하지 않은가, 평화적으로 아무도 해치지 않고 데모를 한다면 미국은 자유국가이니까 얼마든지 허용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체포를 할 것이라고 위협을 한다. 심지어 데모장소가 결정되면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고 한다. 보도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더니, 금방 태도를 바꿔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신에게 연락하란다. 단지 평화운동 관련 현수막과 보도 자료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5시간을 억류해 놓고 나서 하는 말이, 미국은 자유국가이다??

유 국장은 5시간 만에 이민국에서 풀려났다. 공항에서 노심초사 대기하고 있던 조광수 국장옆에는 현지 평화운동 단체인 차모르네이션 소속 두분이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현지 활동가들의 피곤할 테니 좀 쉬라는 제안을 만류하고 곧장 시위장소인 앤더슨 공군기지로 향

하였다. 11시 45분경 기지 앞에 도착하니 이미 그곳에는 10여명의 차모르네이션 회원들이 "무기 배치 반대, 대량살상무기 배치 반대, 핵항공모함 배치 반대"등을 외치며 피켓팅을 하고 있었다.

대표단은 서울에서 준비해온 선전물을 설치, 준비하여 피켓팅을 시작하였다. 현지 활동가들이 메가폰을 전달해 주어 "한국과 괌에서 미군은 나가라, 한미군사회담 중단하라, 우리는 미군 없이 살 수 있다"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와 같이 피켓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유홍 국장은 데비가 사전에 조직한 마리아나스 버라이어티의 신문사, KUAM TV 와 인터뷰를 하였다. 데비에 의하면 마리아나스 버라이어티는 CNN, AP, 로이터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이들 통신사들에서도 보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한편, 이날 저녁 2차로 박석분 국장이 괌으로 출발하였다.

2월 14일(화)

오전 8시 50분. 차모르인 퍼나이와 네비스가 이날 일정을 돕기 위해 숙소로 와주었다.

전 날 데비가 이 곳 기자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늘 회의는 앤더슨 기지가 아니라 수메이(SUMAY) 해군기지라고 한다. 투쟁단은 두 사람에게 곧바로 수메이 기지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투쟁단은 그곳에서 체력이 닿는 대로 철야농성을 해볼 작정이었다.

그런데 퍼나이와 네비스는 곧장 기지 앞으로 가는 일을 난감해했다. 오늘 오전 10시에 장례식이 있다면서, 그곳에 먼저 가자는 눈치다. 투쟁단만 기지 앞에 데려다주고 장례식에 가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기엔 마음이 놓이질 않는다는 거다. 순박한 두 사람의 진심어린 염려가 전해왔다. "그래요. 그럼 장례식에 들렀다 가죠." 이렇게 해서 14일 일정은 차모르 사람들의 장례식 참례로부터 시작되었다.

장례식이 거행된 카톨릭 교회에는 수 백명의 차모르인들이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흰색을 쓰는 우리와는 달리, 유족들은 분홍색 꽃과 완장을 달았다. 추모객들은 유족들과 일일이 포옹하면서 불과 불을 맞대는 자신들만의 인사방법으로 조의를 표했다. 투쟁단을 안내해준 네비스와 퍼나이, 그리고 데비는 성가대석에 서서 흑인영가를 불렀다.

투쟁단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미국에 나라를 빼앗긴 채 식민지 백성이 되어 한 생을 마친 고인을 추모하며 부의를 전달했다. 차모르 인들은 "어제 KUAM TV에서 보았다"며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궁금해 했다. 이유를 설명하자 훌륭하다며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장례식장에서 늦은 아침을 먹고, 빵과 과자 등을 봉지에 챙겨들고 기지 앞에 도착하니 오전 11시 15분이다. 퍼나이와 네비스가 뭔가를 의논하더니 기지 앞 삼각 모양의 잔디지역으로 안내했다.

이곳이 시위 장소였다. 미국 법에 따르면 시위대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을 돌아다니면 처벌대상 이란다. 퍼나이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혼자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지 말라"는 주의를 주고, 조금이라도 잔디 지역을 벗어나려고 하면 소리를 질러 주의를 주었다.

준비해간 대형 플래카드를 기지 맞은편에 있는 신호등에 걸었다. 그리고 유홍 국장이 어디선가 구해온 쇠파이프에 펼침막을 걸고, 평통사 깃발을 쫓고, 형겔피켓 하나씩을 목에 걸었다. 퍼나이와 네비스도 자신들의 요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 사이에 경찰 차량 석대가 기지 앞에 나타나 멈추어 섰다. 군복 위에 POLICE라고 씌어진 조끼를 입은 자들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주시하고 있다가 박석분 국장이 캠코더로 촬영을 시작하자마자 다가와서 시비를 걸었다. "기지는 촬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카메라를 내놓아라"고 했다. 그들은 캠코더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테이프만 주겠다고 테이프를 꺼내주자 그것만 받고 물러섰다. 입국 때도 고비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경직된 태도에 아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투쟁단은 마음을 가다듬고 의연히 시위를 시작했다. 어느 사이 차모르인들이 하나, 둘 도착하여 시위대는 10여 명으로 늘어났다. 어제 앤더슨 기지 앞 시위에 나왔던 분들이 대부분이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나온 4살박이 게이슨도 한 몫을 했다. 게이슨은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숨씨로 '클루'라는 이름의 거대한 소라고 동을 잘 불었다.

차모르인들은 식민지 광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수십 년간 미국에 맞서 투쟁해왔다. 산호섬 광 바다에 늘 정박해있는 핵잠수함의 철거, 광을 차지한 채 원주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미군기지 철수가 이들의 일상적인 요구다. 요즘 차모르인들은, 미국이 NAS 기지를 반환하기로 했다가 일본에서 이동하는 미군을 위해 다시 기지 수용을 요구하는 문제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차모르 민족운동단체의 대표 벤은 “차모르 깃발은 평화를 상징한다.”고 자신들의 깃발을 설명하고, “우리는 성조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신 유엔기를 들고 나왔다”며 유엔 깃발을 보여주었다.

또 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연합의 깃발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차모르인들은 광(GUAM)이라는 이름도 원래는 GUAHAN(we have 라는 뜻의 차모르 말)인데, 미군들이 제멋대로 바꾼 것이라며 그 뜻은 'Give Us American Money' 라고 미국을 조롱했다.

투쟁단이 팽과리까지 동원하여 시위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자 웬일인지 경찰이 다가오더니 뺏아간 테이프를 돌려주며 수고하란다. 차모르인들은 팽과리를 아주 신기해하며 금방 배우더니 쉴 새 없이 쳐댄다. 팽과리가 기지 앞에서 시위를 하는 데는 아주 좋다며 정말 마음에 들어 하였다.

오후가 되면서 언론사들이 찾아왔다. ABC 방송국 기자가 유홍 국장과 인터뷰를 했다. 또 어제 앤더슨 기지 앞에 왔던 KUAM 라디오 방송에서 유홍 국장에게 방송 출연 요청도 들어왔다. 알고 보니 서울에서부터 연락이 되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데비 쿠나타가 KUAM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고 한다. 유홍 국장은 그녀가 진행하는 'TOMORROW SPIRIT CHAMORU'에 출연하기 위해 오후 2시경 방송국으로 향했다. 유 국장이 방송을 통해 “기지 앞에서 야간 농성을 할 것”이라고 했고, 진행자인 데비가 “이들이 과연 안전할까요?”라고 하자 청취자들이 방송국으로 “안전하다”, “아니, 안전하지 못하다”는 상반된 의견들을 전화로 알려오는 등 반향이 있었다. 시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알려오는 시민들이 속출하는 등 이 방송은 뜻밖의 홍보효과를 내주었으며, 이에 부담을 느낀 경찰이 보호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려오기도 했다.

언제 어디서나 대중들은 정당한 투쟁에 대해서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호응해온다. 서울에서 출발하기 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

오후 3시 30분 경, 서울과 전화로 연결이 되었다. 반미연대집회에서 전화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던 것. 차모르인들을 소개하고 연대투쟁을 알리고 싶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다. 서울 투쟁은 잘 되고 있을까? 모두들 바쁘고 힘들겠지? 좀 더 여력이 있다면 양쪽의 투쟁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미군들 중에는 차량 굉음을 내며 시위를 방해하는 자들도 있었고 욕설을 상징하는 손짓을 하며 지나가기도 하고 “GO HOME!”이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반면 차모르인들은 대부분 차량 경적을 울리거나 손을 흔들며 시위를 지지했고, 주먹을 쥐어 보이기도 했다.

투쟁단과 함께 농성을 벌이는 차모르인들은 욕을 해대는 미군들을 향해서는 때로 같이 욕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하파데이(HAFA ADAY) - 편안하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지지의 뜻을 표하는 차모르인들에게는 “비바 차모르!”라고 하며 승리를 기약했다.

결국 우리는 차모르인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에 힘입어 밤 10시 30분까지 촛불시위를 이어갔다. 우리의 촛불 행사에는 10여 명의 차모르인들이 함께 했으며, 이들은 얼음물과 햄버거, 랜턴을 들고 왔으며 호롱램프와 라디오를 가지고 와서 컨트리 뮤직을 크게 틀어놓아 농성장은 마치 캠핑장처럼 느껴졌다.

2월 15일(수), 16일(목)

투쟁단은 전날에 이어 오전 농성을 계속 진행했다.

역시 이날도 차모르인들이 투쟁에 동참했고 현지 의원과 한국인 교민이 지지방문을 와 주었다.

투쟁단은 오후 12시에 현지 대응투쟁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휴식을 취한 후 16일에는 콰미군기지를 둘러보았다.(미군기지를 돌아본 이야기는 홈페이지에서 보세요) 조광수, 박석분 국장이 먼저 귀국하고, 유홍국장은 17일 미군이 반환해놓고 최근 오키나와 주일미군 해병대 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시 수용을 요구하는 부당한 요구에 맞선 현지인들의 투쟁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18일 새벽 귀국하였다.

한미동맹의 침략동맹으로의 전환이 가시화되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통해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고히 보장받기 위한 한미 양국의 밀어붙이기가 구체화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현지 대응투쟁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 시민사회진영으로는 처음으로,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공동으로 미군기지 앞 농성을 전개하고 이것이 현지 언론에 널리 보도됨으로써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던 한미 당국에 크나큰 부담을 주었다. 아직도 한미 당국은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SPI 의제가 갖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내용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한미 당국의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번 투쟁이 그 부담을 더욱 더 크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본다.

다음으로 이번 투쟁은 콰미 미국의 전략적 요새로서 동북아 패권의 전초기지라는 사실, 미일동맹의 강화가 콰미의 기지 확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지에 가보지 않았다면 미국의 군사전략적 이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 생생하게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이번 현지 투쟁은 차모르인들과의 연대를 확보함으로써 미국의 부당한 패권적인 군사전략적인 요구에 맞선 투쟁 전선을 확대하였다. 차모르인들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의 역사는 우리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투쟁과 다르지 않았다. 미국에 맞선 국제연대투쟁의 확대가 국내투쟁을 촉발시키는 의의를 갖는 만큼 차모르인들과의 연대를 잘 살려내고 발전시켜내야 할 것이다. 멀리 콰미에서 한국 교민들을 만나고 이들의 힘을 모아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현지 투쟁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한 미국의 군사전략적 이해와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끼칠 엄청난 부정적 결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냄으로써 전략적 유연성을 저지, 파탄내는 동력을 확보하는 일이야말로 이번 투쟁의 의의를 더욱 크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번 투쟁을 위해 물심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콰미 현지투쟁단/박석분, 유홍, 조광수

6차 SPI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려진 수메이(SUMAY) 해군기지 앞에서 차모로네이션과 공동으로 시위를 벌인 현지투쟁단

네비스는 자신이 자신이 직접 SPI 회의 반대 피켓을 만들어 시위에 나섰다.

앤더슨 공군기지의 활주로가 오른쪽 끝 절벽까지 이어져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경제적 한미 동맹 강화

AWC 한국위원회 대표 허영구

2월 3일 워싱턴에서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었다. 한국정부는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국 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 쿼터)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영화인들이 주장하듯이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규정한 관계로 국무회의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협상도 하기 전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버린 점이다. 그렇다면 향후 2007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는 한·미 FTA 협상내용은 실질적으로 결정된 것과 다를 없다. 가장 중요한 농산물 분야를 비롯하여 영화, 교육, 의료, 법률 등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 소장(태미 오버비)이 얘기하듯이 이제 군사,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동맹까지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군사적, 경제적 한·미 동맹 체제이다. 한·미 양국은 미군의 전 세계 130개국 750여개 미군기지에 대한 전면적 재편에 발 맞추어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였다. 이제 한반도는 한미 안보 조약상의 주한 미군의 성격이 바뀐 채 중국, 이라크를 포함하여 전 세계를 상대로 미 제국주의 군사침략의 전초기지로 변하게 되었다. 물론 미국의 대북한 공격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러한 시점과 맞물려 한·미 FTA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려는 시도는 제국주의의 군사적 침략은 경제적 침략과 함께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침략을 위한 물질 토대는 침략을 당하는 민족이나 국가의 해당 민중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결과물이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군사적, 경제적 제국주의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체제가 지닌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모순인 '자본의 위기'로부터 비롯되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평균이윤율 하락으로 인해 자본이 위기에 직면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베트남에 대한 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 엄청난 군사비 지출에 따른 재정과 무역에서 쌍둥이 적자에 직면하였다. 2차 대전 이후 케인즈 경제체제인 '전후경제체제'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위 말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속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와 완전 고용이라는 것은 유지될 수 없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1970년대 미국 본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80년대 남미의 실험을 거쳐 1990년대 말에는 아시아와 동유럽으로까지 확산되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미국 민중들의 삶은 양극화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간이 1달이나 늘어났고 노동자의 60%는 실질소득이 정체 또는 감소하였다. 최저임금이 하락한 가운데 최고경영자(CEO)들의 임금은 노동자 평균 임금에 비해 500배에 이른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대명사로 칭송(?)되는 대처리즘이 휩쓸고 간 영국 역시 공공성이 파괴되어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문맹률까지 증가하였다.

지금 한·미 FTA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WTO세계경제질서를 완성하기 위한 양면 전략이다. 1999년 시애틀, 2003년 칸쿤, 2005년 홍콩에서 벌어진 전 세계 민중들의 WTO반대투쟁은 WTO체제가 순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들은 전 세계 민중들의 투쟁을 고립, 분산시키려 한다. 특히 칸쿤과 홍콩에서 보여준 한국 민중들의 반WTO투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간 또는 지역내 FTA협상으로 WTO내용을 관철시키

려 하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WTO, DDA협상에서 농업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봉쇄하기 위해 한·미 FTA협상을 통해 농산물에 대한 완전개방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들 스스로 주장하듯이 북미자유무역 협정(NAFTA)이래 최대의 사건으로서 한·미 FTA를 규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한·일 FTA가 고착상태에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일본이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지 않기 때문이다. 1인당 국민소득 세계 1위인 스위스도 미국과의 FTA협상 과정에서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FTA체결을 포기한 바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 자국의 다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농산물 시장 개방을 강요하는 것만도 아니다. 미국인들이 지난 10년간 1,400억달러에 달하는 농가 보조금(수령 농가 140만)을 특별세로 납부했다. 그러나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농과 지리적, 정치적으로 특정하게 편중되어 지급되었다. 20%의 농가가 전체보조금의 87%를 수혜를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추진하는 WTO와 FTA는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분배구조라는 외형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노동과 자본간의 분배 문제이다. 농산물 시장, 교육, 의료 등 서비스 시장개방,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국가간, 계급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군사적 제국주의의 양면의 얼굴이다. 이 신자유주의가 한반도에서 한·미간 경제, 군사적 동맹으로 강화되고 있다. 2006년 한·미 FTA협상 반대는 당면한 한국농업사수, 비정규직 철폐, 공공성장화 투쟁 그리고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과 함께 전개되어야 할 한국민중들의 최대의 과제다.

한·미 FTA는 WTO로 가는 전(前) 단계인

지역적 과도 경제체제이자 한·미 군사동맹의 물적 토대를 한국 민중들에게 부담하겠다는 의도이다.

굿바이 앨런

뉴욕, 미술인 최성희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가 미국 크리스티안 사이언스 모니터 이라크 파견 기자 질 캐롤의 이라크 복수 여단에 의한 납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와 같이 차 안에 동승했던 이라크 통역인의 죽음은 이미 20만이 넘어 30만에 육박해 가는 이라크인들의 죽음에 또 하나의 숫자를 더한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다. 매일 매일 쏟아지는 엄청난 뉴스들로 인해 나는 놀랄 기력조차 잃고 무감각해지고 있었다. 더구나 대부분의 미국 주요 언론들은 질 캐롤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연찮게도 CBS에서는 통역인인 ‘앨런 존 가지’를 그가 죽기 전 1년 전에 인터뷰 했었고 그는 마치 그의 죽음을 예고하기라도 한 듯 이라크에서는 아무나 어느 순간에도 죽을 수 있음을 토로했다 한다.

내가 그 이라크 통역인 역시 꿈을 가진 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한 것은 한 이라크 소녀가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글을 읽고 나서였다. (<http://riverbendblog.blogspot.com>) ‘이라크로부터 소녀의 이야기-불타는 바그다드’라는 제목으로 리버벤드(riverbend: 필명)는 주기적으로 전쟁과 미군점령 하의 이라크가 겪는 비극, 그 안에서 살고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전쟁과 점령으로 황폐해진 경제, 제한된 전기와 인터넷 사용시간, 폭격 속에서 쓰인 그녀의 글들은 그녀의 필명이 떠올리는 ‘강’처럼 나의 메마른 무관심, 게으름, 회의를 반성하게 하는 생수와 같은 것이었다.

1월 12일자 리버벤드의 글을 요약, 인용해 본다. 리버벤드는 글을 쓸 즈음에야 그 죽은 통역인이 자신의 절친했던 친구 ‘앨런’이었음을 알았다. 전쟁 전에 앨런은 수도 바그다드의 최고 변화가의 음반가게 주인이었다. 그의 가게를 들리는 사람들은 아라비아 음악뿐만 아니라 서구의 다양한 음악들을 접할 수 있었고 그의 음반 가게를 들리는 것은 1991년 걸프 전 이후 10년 이상의 유엔 경제제재 속에서 외부와의 교류에 목말라 있었던 리버벤드와 같은 젊은이들에게 ‘천국’ 과도 같은 것이었다. 앨런의 음반 지식은 상당해서 그는 고객의 몇 마디만 듣고도 고객이 찾는 음반을 찾아낼 수 있었다.

“앨런과의 교류는 외부와의 한 연결이었어. 앨런의 가게를 찾는 것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지.”

그의 전문은 전기공이었지만 열정은 음악에 있었다. 그의 꿈은 뮤직 프로듀서가 되는 것이었고 자질 있는 젊은 이라크 음악인들을 발굴하는 것이었다. 핑크 플로이드, 지미 헨드릭스에 대한 토론이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또한 국내, 국제 소식통이기도 했다. 유머가 넘쳤고 무엇보다도 그의 인간성은 주변에 훈훈함을 주었다. 기독교인이었던 그에게는 그를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이 있었다.

“앨런의 가게가 삶의 어려움과 걱정들을 잊게 한 천국이 된 것은 음악 때문이 아니었어. 그것은 앨런 자신이었어.”

2003년 3월 전쟁이 터지자 앨런의 가게 역시 막대한 영향을 받았다. 차량 폭탄, 총격 사건, 폭력적 저항이 일대를 떠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의 가게를 찾는 일이 드물어졌다. 극단파의 살인 위협과 창문으로 날아온 수류탄 세례를 받고서야 그는 그렇지 않아도 닫는 날이 많아졌던 그의 가

게를 완전히 닫을 수밖에 없었다.

“E와 내가 그의 가게를 다시 찾은 것은 가게가 완전히 닫히기 전이었어.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가게에 전기가 끊어진 것을 보았어. 램프 같은 것이 가게 안을 희미하게 밝혔고 앨런은 CD를 고르며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 우리를 보자 그는 신들린 사람처럼 좋아 했어. 우리가 음악을 듣기란 불가능했지. 그래서 E와 그는 잘 안 맞는 리듬과 박자를 함께 맞춰가며 좋아하는 노래들을 불렀어.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리듬과 음정을 듣기 시작했고 최근의 농담들을 나눴지. 이따금 들리는 폭발소리가 우리를 다시 현실로 돌리고 나서야 우리는 외부 세계가 완전히 잊혀진 채 두 시간이 지났음을 알았어.”

리버벤드의 마지막 인용구는 앨런이 사랑했던 핑크 플로이드의 노래 ‘굿바이 블루 스카이’이다.

“당신은 공포에 질린 사람들을 보았는가?
당신은 떨어지는 폭탄들을 보았는가?
당신은 우리가 왜 피난처로 피해야 하는지 물어 본 적 있는가?
용맹한 신세계의 약속이 맑은 푸른 하늘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을 때
당신은 공포에 질린 사람들을 보았는가?
당신은 떨어지는 폭탄들을 보았는가?
불길은 사그라졌지만 아픔은 이어지네.
굿바이, 푸른 하늘.
굿바이, 푸른 하늘.
굿바이. 굿바이 ”

그의 죽음 소식에 이틀 동안 꼬박 울었던 리버벤드는 “굿바이 앨런”을 마지막으로 1월 12일의 글을 마쳤다.

2월 7일 현재 약 25만의 이라크인들이 전쟁으로 죽었다. 미군의 죽음은 2258명이고 미국이 이라크전으로 사용한 돈은 이제까지 2390억 달러 이상이다. 올 3월 18일에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 3주년이 된다.

좌 _ CBS: 1년 전 CBS 인터뷰에서 앨런 존 가지
우 _ AP Photo/ Hadi Mizban: 통역가로서 앨런의 기자증

위 _ 1월 31일 저녁 부시의 국정 기초연설에 반하여 반전, 반정부를 외치며 뉴욕 타임즈 광장으로 나온 시민들

아래 _ 1월 31일 반전 집회 시위가 열렸던 뉴욕 타임즈 광장. 부시 정부의 테러와의 전쟁 선언 이후 곳곳에 세워진 ‘신병 모집소’ 중 가장 악명 높은 뉴욕 타임즈 광장의 ‘육군 신병 모집소’ 주위를 기마 경찰대등이 에워싸고 있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야말로 트랙터 평화순례의 성과

전북 평통사 최성훈

2006년 1월3일 아침 평택 농민들과 함께 트랙터 평화 순례를 시작하였다. 이제 막 기자회견을 마친 주민들과 함께 트랙터에 시동을 걸고 대추리를 떠나 긴 순례 길에 올랐다. 내가 맡은 역할은 순례물품을 싣은 트럭을 운전하는 것이었다.

순례의 고단함은 예상보다 컸다. 시속 20~30km로 전국을 순례하니 날이 갈수록 몸의 피로는 쌓여만 갔다. 중간 중간 쉬는 시간엔 다들 피곤하다며 “조금만 더 쉬어가자! 어디 운전자 남는 사람 없느냐”라고 말씀도 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피곤함에 지쳐있어도 순례지에 도착해선 웃을 수밖에 없었다. 지역 사람들이 차량이며 트랙터에 “미군기지 철수! 평택 강제 토지 수탈 반대!” 등의 온갖 선전물을 붙이고 마중을 나와 순례단을 환영했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멀리 있어 자주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힘을 실어주기위해 마중을 나왔다”라는 등의 말로 순례단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성대한 환영에 순례단은 더욱 힘을 낼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은 날이 너무 추워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일도 있었다. 준비해간 도구로 트랙터를 겨우 정비해서 다행이었지만... 주유소가 나오면 “주유소 습격사건”이라도 찍는 양 주유소 마당을 트랙터로 점거(?)하고 일제히 기름을 넣는 풍경도 자아냈다. 점심식사를 함께한 어떤 지역 농민은 국방부에서 농사를 못 짓게 한다는 말에 “아따! 우리 농민회 사람들 트랙터 많으니, 날 잡아서 다 몰고 평택 가서 논들 다 갈아주고 와야 겠고만!” 이라고 하시면서 농민회 회장님의 의견을 물으신다. 회장님은 “까짓것! 날 잡아서 한번 올라갑시다!”하셨고 이 농민의 제안은 순례단이 가는 곳마다 그곳 농민들에게 올해 농사는 전국 농민들과 함께 짓도록 하자는 제의를 하게 만들었다. 다들 기쁘게 응해주셨고, 그 모습에 순례단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었다.

평택 주민들이 순례를 계획한 것이 평택의 상황을 많은 분들에게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어 계획한 것이었기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호응이 순례단에게 더 큰 희망과 기쁨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그리고 순례단은 들르는 곳마다 평택 소식이 실린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시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평택 상황을 pingping 열심히 설명하였고, 홍보물을 보는 시민들은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몰랐다. 열심히 싸워서 꼭 평택을 지켜 내라!”등 격려의 말과 따뜻한 차를 대접하는 분들도 있었다. 그리고 부산에서 만난 한 시민은 자기도 평택에 살고 있는데, “평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 이번 500일 촛불집회와 3차 평화대행진에 꼭 한번 가서 팽성 주민들과 함께하도록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미군기지 확장이 갖는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다.

날이 갈수록 몸의 피로가 쌓여가며 순례단의 얼굴에 피로한 기색이 보여야 마땅하겠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순례단의 얼굴은 순례 일정이 더 해갈수록 희망에 찬 얼굴로 환하게 밝아지고 있었다.

힘든 일정 속에 진행되던 순례는 마무리 단계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택 문제를 알리고자 서울에 입성하는 것으로 순례일정을 변경하였다. 서울로 향하는 중 안성외곽에서 안성 경찰들에게 봉쇄당하게 되었는데, 안성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있지도 않은 “트랙터 도로주행은 불법이며,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봉쇄한다.”며 “서울로는 갈수 없다! 평택으로 돌아간다면 평택까지 에스코트 해주겠다” 는 것이었다. 도로교통법 책자를 제시하며 대응하는 순례단에게 경찰서장은 새로 개정된 책을 가져와 확인 시켜주겠다고 순례단을 고착시켜 놓고 사라진 후 모습을 보여주질 않았다. 순례단은 그 자리에서 밤을 지새며 경찰에 항의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중 송태경 주민대책위 기획부장은 “강제로 쫓겨날 주민들과, 아빠가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자식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다. 자식에게만은 편안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우리 아버지들의 눈물이었다. 경찰의 봉쇄로 밤을 지새 수밖에 없게 된 순례단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서로를 격려하며 밤을 보냈다. 아침이 되자 경찰들은 버스를 이동하려 했고 순례단은 전날 밤의 불법고착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몸으로 버스를 막았다. 경찰과의 실랑이가 이어지던 중 김지태 위원장님이 트랙터에 시동을 걸고 버스 앞을 막아 버렸다. 그러자 한 전경이 트랙터 위로 올라가 유리창을 발로 차 깨트리려 하는 것이 아닌가? 전경을 끌어내자 경찰들이 달려와 순례단을 막아서고, 발로 찬 전경을 빼돌렸다. 불법적으로 막아선 것에 대한 사과와 트랙터 창을 발로 찬 전경의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여전히 경찰은 묵묵부답이었다. 상황이 잠잠해지고 잠시 순례단이 쉬고 있는 사이 경찰들은 순식간에 병력과 차량을 철수하고 사라져 버렸다. 순례단은 서울로 향하고 싶었지만, 500일 촛불 행사에 참가하는 문제와 서울로 향하면 다시 막힐 것이 뻔한 상황이었어서 평택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평택에 도착한 순례단은 많은 분들의 환영을 받았고, 500일 촛불행사를 끝으로 1차 평택 트랙터 평화순례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이번 순례를 통하여 평택 주민들은 많은 것을 얻었다. 많은 국민들의 호응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자신들도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돌아왔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노인 분들이라 미군과 국방부를 상대로 싸우기엔 너무나도 힘이 부족해 보인다. 하지만 1차 트랙터 순례로 얻은 힘과 자신감으로 이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질긴 놈이 승리한다”는 것을 주민들은 몸으로 알고 있다. 오늘도 평택 농민들은 자신의 생존권은 물론 한반도 전 민중의 생존을 위해 고단한 싸움을 하고 있다.

11일 동안 트랙터 순례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것이 나에겐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나를 비롯한 모두가 촛불을 들어 미군기지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때 평택 농민들이 올해도 농사짓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평택 농민들의 눈물은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이기 때문이다.